

데스크 시국



윤영기  
체육부장

사상 처음으로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선출하게 된다. 광주시체육회는 내년 1월15일,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12월15일에 선거를 치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43조2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해 각종 선거에 체육단체가 동원되는 폐단을 근절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래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아 온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인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단체장과 교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政)·체(體) 분리라는 법 제정 취지를 거스르는 여론이다. 신임 회장이 체육회 재정 독립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존적으로 살림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씩튼 현

결국 돈이 문제인 것인가

실론이기도 하다. 이는 광주시나 전남도체육회를 비롯해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예산의 90%에 대한 편성권이 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독자적으로 체육회를 꾸릴 재원을 마련할 수익구조도 사실상 없다. 시·도 체육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체육회 법인화 및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1월15까지 치르도록 돼 있는 선거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보완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뒤틀리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

제도적 미비는 돈이 선거판의 상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 체육인은 단체장과 결이 다른 사람을 뽑으면 예산이 크게 줄어 체육계가 위축되는 것이 나쁘고 우려한다. 의외로 많은 체육인이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 체육 생태계도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물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에 공적자금에 입맛에 따라 지원해 온 단체장의 폐단을 지적하고 바로잡자는 후보자는 설 땅이 없는 게 당연하다.

체육회 재정과 맥이 닿아 있는 '자치단체장 교감설'은 왜곡된 현상의 하나다.

재정 독립이 요원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과 통하는 사람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제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보상 심리다. 수십 년 지자체에 재원을 의존해 온 체육계의 관성을 무작정 나무랄 수만은 없다. 벌써부터 후보군에 오른 사람이 단체장과 만났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마치 옛 지방자치 선거에서 '내친(內選) 설이 득세했던 때와 같은 현상이다. 결국 도로 정치와 체육이 아합한 셈이다.

최근 전남도체육회장 선관위가 후보자 소견 발표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선거 일정상 어려움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깜깜이 선거'다. 오직 선거운단 399명의 손에 전남 체육의 미래가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이미 선거 룰을 정한 이상 곱씹어 봐야 별 의미는 없겠지만, 한마디 남기고 싶다. 요즘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공약 걸고 정견 발표한다. 학생들은 이게 민주주의라고 배운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미래 기약

광주 체육회의 경우 '선거 패심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칙이다. 체육회 임원들은 물론 종목 단체장이 두루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단일 후보로 교통정리하자

는 내용이다. 선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고 시정에 동조하는 인사를 추대하지는 의미다. 광주시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다고 전해진다.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단일 후보는 투표 표 없이 당선증을 받고 무형입성하게 된다. 모양새는 좋지만 선출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광주시체육회는 모양새가 크게 일그러지게 됐다. 체육계 동향과 별도로 법에 따라 선거 룰을 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라면 제도를 마련해 봐야 첫일이다. 활용하지 않을 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남비려야 했다. 연간 공적자금 177억 원을 쓰는, 광주 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꼭 이렇게 뽑아야 할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우회하면서까지 말이다.

광주-전남 체육회장 선거는 벌써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 그 중심에 '재정 문제'가 있다. 그것 말고는 없다. '정치와 절연하고, 체육계의 비전을 마련하고, 위상을 바로 세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본질론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가 있다면 현실성 없는 헛소리라는 타박을 들게 분명하다.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지루한 뒤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penfoot@

社說

'항제 골프' 전두환 경호 등 모든 예우 박탈을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가 건강할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엿그제 공개된 가운데, 골프 라운딩 당시 경찰의 경호 인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는 그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 씨의 골프 라운딩에 동원된 경호 인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번에 병에 걸렸다고 하는 전직 대통령 골프 치러 가는데 경호 인력이 또 보였다고 하던데 몇 명 정도 수행했는지 파악됐느냐?"라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네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 경호 인력까지 제공

받았으니 사실상 '항제 골프'를 즐긴 셈이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경호·경비 등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무기 정역이 확정돼 다른 예우는 박탈됐으나, 경호·경비는 예외 규정에 따라 여태껏 제공되고 있다.

전 씨는 12·12 군사 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5·18을 유혈 진압한 주범이다. 그런 그에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경호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경호·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배제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전 씨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민선 7기 들어 해묵은 현안 사업의 실태가 하나하나 풀리고 있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어 난제 해결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최근 하나둘씩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였던 여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그것이다. 여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서진건설이 '공모 지침대로 사업 이행보증금을 일시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달 중 사업 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갈려 17년간 제자리를 맴돌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도 지난 9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

로 본격화했다. 민선 6기 때 시작된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공장 신축 공사 입찰자 선정이 공고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광주시 공적 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국장급 간부의 구속에 이어 최근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 중지 요구도 많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일로 최대 규모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겠지만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

역사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석의 차이와 지혜를 얻는 수준의 높낮이는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 기록이고 기억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점은 변함없다. 변하지 않는 과거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는 각자 자신의 함량에 달려있다. 개인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다 그렇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과정,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의 성찰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현재의 우리가 우리네 삶의 터전인 도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공간을 가

광주 도시역사관을 전일빌딩에

지고 있는가? 광주의 미래 도시 모습을 상상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신창동 선사 시대 유적, 고려 시대 읍성 흔적을 보면 광주의 오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다. 아주 오랜 역사는 박물관에 있다고 치고, 최소한 광주가 전라남도 관찰부로 된 1896년 전후부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미군정, 산업화, 도시화, 전남도청의 남악신도시 이전을 포함하여 현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광주의 도시역사관이 없다. 어디서 도시에 대한 지혜를 얻을 것인가?

'광주광역시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가 많다. 고층 아파트가 문제다. 도시 관광 문화 자원이 없다. 경쟁력이 부족하다.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등등... 문제점은 잘 나열하지만 지속적인 지혜를 얻고, 공유하고, 공감하며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인제 육성과 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집약된 공간이 있어야 그나마 지속적인 교류와 실천의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고, 광주 사람들의 삶의 장소에 대한 상상력과 지혜를 얻는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

옛 전일빌딩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곳에는 헬기 탄흔 전사관과 남도 관광 홍보관을 비롯하여 여러 기능의 공간으로 채워진다. 11층 옥상 공간은 광주 구도심은 물론 무당산 조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도심 여행의 시작점이자 마무리할 지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건물에 모 은행 소유의 공간이 있다. 급남로변 코너 부분 3개 층에 바닥 면적 약 1800㎡정도다. 현재는 비어 있고 추후 용도는 모르겠다. 이곳을 주목해 본다. 옛 전일빌딩은 이미 광주의 문화 자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기업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이곳을 매입해야 한다. 만약 광주도시공사가 2011년에 전일빌딩을 매입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었다면 지금쯤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보존되어 문화 자원으로 재생되고 있고, 모 은행 소유의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시 광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곳을 광주 도시역사관으로 꾸렸으면 한다. 옛 전일빌딩은 광주 도시 역사와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건물이며 역사적 장소에 자리하고 있기에 더욱

더 의미와 가치가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수백억, 수천억 사업이 여럿 진행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여기저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예산 대비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 지역 후손들에게 부채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누를 줄이기 위한 지혜는 광주 도시역사관에서 찾을 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면서 축적된 역사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고, 지역적인 한계를 지리적 장점으로 만들 창의적 발상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도시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수준이 현재 모습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선조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거울 삼아 지금부터라도 후손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감사할 수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허락된다면 규모 있게 장소를 정하고 신축하여 전시 및 각종 문화 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 도시역사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전일빌딩 일부 남은 공간을 매입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 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식량 안보

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23%에 그쳤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가축이 먹는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7%가 수입품이라는 뜻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곡물을 자국에서 생산하며 식량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1.5%에 이르렀다. 특히 호주의 곡물 자급률이 289.6%로 가장 높았다. 캐나다는 177.8%, 미국은 125.2%로 북미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곡물 자급률을 기록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비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국의 수출 규제 등에 대비해 품목별로 3~4개 국가 정도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외 산지의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농업 생산 증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요 곡물들의 국내 농업 생산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갈수록 농업 환경은 어려워지고만 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WTO(세계 무역기구) 개발 대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부문은 앞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업의 가치가 식량 안보를 넘어 자연 환경 보전, 식품 안전성, 국토 균형 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은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본 소득 보전, 공익형 직불 제도 확대 개편 등을 비롯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농업 보조금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28억 9800만 달러로 농업 총생산액 대비 6.7%에 불과하다. 농업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농업 보조금 비중이 크다. OECD 평균은 10.6%였고, 유럽연합(EU)은 이보다 더 높은 17.1%에 달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41.3%로 우리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선진국에서는 농업 보조금을 단순히 농가 소득 증대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농업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농업 보조금을 단순히 농가 소득 보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의 수령으로 있던 시절에 임금께 올린 상소문에서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종(上農)을 통해 농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농은 농민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고, 후농은 농민의 소득이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농의 의미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11월 11일 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더욱 농업인의 지위가 높아지고 농사 짓기 좋은 환경이 조성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중국 서진(西晉) 시대의 문신 부현(傅玄)이 편찬한 '태자소부장'에는 저 유명한 '근주자흑 근묵자흑'(近朱者赤 近墨者黑)이라는 경구(警句)가 등장한다. '붉은색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붉어지고 검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이다.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주변 사람 등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시조가 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것에 검은 때 묻힐새라./진 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는

근묵자흑(近墨者黑)

것이다. 두 의원의 불출마 배경에는 '한심한 한국 정치'가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불거진 여야 대립과 광장의 분열된 민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것에 스스로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개인 소신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 현실 등이 이들을 정치판에서 떠나게 했을 것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인이 아닌 논객으로서는 허심탄회하게 정치판을 비판했지만, 뭔가 바꿔보겠

다며 몸소 뛰어 들어가 본 정치판은 많이 달랐던 모양이다. 어찌 보면 이들의 의지가 스스로 겪은

게 아니라 현실 정치의 검은 때가 묻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다선(多選)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당내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 의원과 표 의원을 '백로'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이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데는 공감한다. 내년엔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는 '까마귀' 보다는 많은 '백로'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